



LPG경차 허용이 바람직

한국LPG가스공업협회 전무 권순영



고유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노무현대통령은 지난해 국무회의(06.5.23)에서 수송부문의 에너지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경차보급 활성화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그해 12월 국무총리 주재로 16개 정부부처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4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산자부 장관이 경차 보급 활성화방안을 보고하였으며, 그중 한 가지가 경차 연료로써 LPG의 허용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었다.

LPG경차가 검토되자 해당 업계가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선 경차를 만드는 자동차업계는 찬성입장이다. 수요가 있다면 자동차업계로서는 당연히 LPG경차를 생산해 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할 의무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경차보급이 자동차산업은 물론 일본경제 부활의 견인차 역할을 했듯이, LPG경차가 과도기에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구매하게 될 소비자들도 LPG경차에 대해서 크게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허용된 경차의 연료로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LPG도 허용될 경우 소비자의 연료비절감은 물론 차종에 대한 선택의 폭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휘발유·경유를 선택할 것인지, LPG를 선택할 것인지, 연료에 대한 선택권은 관련업계가 아닌 소비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한다.

현재로서는 LPG경차 허용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곳은 기존 경차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정유업계 뿐이며, 그 반대 논리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LPG경차는 고유가관련 에너지절약, 대기질개선, 교통혼잡완화, 소비자의 연료비절감 및 구입차량에 대한 선택폭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등 국가적과제와 자동차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정유업계가 LPG경차에 대해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안전성이다. 하지만 이는 연료업계가 걱정할 문제가 아닌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맞게 공급하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이다. 자동차 메이커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왜 연료업계가 걱정하고 있는 것인가. 게다가 이미 LPG경차가 대한민국 땅에 버젓이 운행되고 있지 않은가.

환경성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정유업계는 반대논리로 LPG의 환경성이 오히려 휘발유보다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 역시 정유업계에 유리한 과거의 자료만을 골라 제시한 것일 뿐, 가스체 에너지인 LPG가 석유류보다 환경성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쉽게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다만 점점 강화되고 있는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휘발유·경유 경차는 물론이고 LPG경차도 출시될 수 없음을 명확히 말해두고 싶다.

이처럼 안전성·환경성 등 전혀 명분 없는 사유로 정유업계가 LPG경차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휘발유소비감소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휘발유소비량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며 휘발유소비증가율감소는 예상되나 그것은 에너지소비절약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경차에 대해 특별소비세 및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낮은 자동차세부과, 고속도로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50%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06년말 국내 경차보급률은 5.9%로 일본 35.3%, 미국 13.9%, 서유럽 35.4%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경차보급 활성화방안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산업연구원은 LPG경차 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차지원 대책이 이뤄질 경우 2015년 경차비중이 약 16%까지 상승할 것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다.

따라서 LPG경차는 고유가관련 에너지절약, 대기질개선, 교통혼잡완화, 소비자의 연료비절감 및 구입차량에 대한 선택폭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등 국가적과제와 자동차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업계간 이해대립차원이 아닌 소비자와 국민경제적 차원임을 다시 한번 말해두고 싶다.